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제·재정·행정시스템 준비 총력

광주시·전남도·행안부...대민 서비스·행정전산 논의 통합 로드맵·가이드라인 마련...공동 대응 체계 구축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통합 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 약 2500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특별시 운영에 걸맞은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78건의 초안을 마련해 현재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8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

개정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 현황을 정밀 점검해 통합 예산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보편e 등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작업을 추진해 예산 집행의 연속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기반시설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공인 약 2600개와 행정 공무원 72명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및 안내표지판 등 1만6000여개 시설물에 대한 정비 목록을 확정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양 시도 실무별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과제 등도 논의한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통합 직후 중단 없이 제공돼야 할 대민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시청 집무실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비스와 행정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 정비를 비롯해 행정 전반의 통합 과제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통합 로드맵 수립과 핵심 과제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현장 애로를 공동으로 관리·대응하기로 했다. 출범 초기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가 사전에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 예비후보

AI·에너지산업 등 경제 분야 청사진 제시

▶1면에서 신정훈 후보는 마지막 연설 자료 나서 "이재명의 감각. 그 끝에 신정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닿은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각 후보들은 또 40년 만에 다시 한 가족이 된 광주·전남, 전남·광주의 산업·경제 공동번영 비전과 구상을 밝혔다.

정준호 후보는 "AI 대전환을 통해 영남을 앞서고 수도권에 도전하겠다"며 4년 20조원인 통합지원금을 5년 30조원으로 늘려 대도약의 마중물로 삼고 구체적인 산업 설계보다는 대규모 기획론과 투자 확

보문에 방점을 찍었다.

민형배 후보는 "20조원을 100년 종잣돈으로 투자하되 80%는 기업 유치 인프라에 쓰겠다"고 약속했고 동부권은 신산업, 서부권은 에너지 전환, 중남권은 농생명·치유, 광주권은 AI·문화를 제시했다. '전남 소외 봉쇄론'도 강조했다.

주철현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수도와 AI 기반 첨단 산업벨트, 전기요금 차등제, 신소재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공학·항공·물류 혁신까지 포함한 산업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이병훈 후보도 반도체 기업 유치와 점

단산업 핵심 거점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함께 AI, 반도체, 방산,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항공우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후보는 광주권은 AI·미래차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은 오랜 전략산업인 철강·화학산업 재구조화와 반도체, 서부권은 재생에너지·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300조원 경제권, 인구 500만 시대, 지역 중심 생활권'을 제시했다.

김영록 후보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2차전지 중심의 4개 권역 재편 구상

안을 제시했고 특히 첨단 반도체 산업 혁신거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언했다. 복지 상황 평준화도 강조했다.

신정훈 후보는 '신남방경제 중심도시'와 문화수도 비전과 함께 '3핵3축, 7대 경제축' 전략, AI 첨단산업특구 등 중장기 산업 설계를 제안하고 보스턴·싱가포르 모델을 결합한 혁신도시를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앞으로 조별토론회(17~18일), 예비경선(19~20일, 권리당원 100%), 권역별 심층 토론회(27~29일, 투표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를 거쳐 4월 3~5일 본경선(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같은 달 12~14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신설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에 강효석 이길용 3급 승진...문화융성국장 임명 정두혁·박주환·민순희...4급으로 승진

전남도는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을 3급 국장으로, 정두혁 건설행정팀장, 박주환 소통기획팀장, 민순희 대기환경팀장을 4급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6년 상반기 기수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다. ▶관련인사 17면

이번 인사는 조직 신설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등에 따른 승진·전보인사로 인사규모는 국장급(3급) 2명, 준국장 및 과장급(4급) 6명, 팀장급(5급) 14명, 6급 이하 80명 등 총 106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다.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장급 2명, 과장급 8명, 팀장급 23명, 6급 이하 57명 등 총 90명의 승진자를 결정·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이 3급 국장으로 승진하며 문화융성국장에 임명됐다. 강효석 문화융성 국장은 신설된 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을 맡는다.

정두혁 건설행정팀장, 박주환 소통기획팀장, 민순희 대기환경팀장은 4급으로 승진하며 각각 회계과장, 고항시랑과장, 국제협력지원관에 선임

됐다.

강경문 고항시랑과장은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 배성진 환경정책과장은 여순사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감시성 회계과장은 통합지원담당관을 맡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통합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신설해 조직·인사·재정·법규정비와 각종 행정시스템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이르기까지 통합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와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AI산업과, 화학철강산업과 등을 TF에서 정식 직제화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결원 직위를 신속히 충원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효석 이길용

▶1면 '막오른 특별시장'서 계속

특히 광주권과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등 권역별로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표심과 청년과 중장년층이 많은 도시로 나누는 연령별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표심이 분산될수록 이런 합중연령의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런 합중연령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장이 소소한 이해관계에 얽힐 여지가 높아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시의 행정체계 조정도 발등의 불이다. 현행 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광역도 산하 시·군은 사무와 재정권한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자치구가 처러하지 않고 광역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도 다수 존재하고, 지방세 배분 구조 역시 상이하다. 통합특별시장은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부터 당장 조정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임기 4년 내내 이런 문제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장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이해관계 조정이나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 일마다 좌고우면할 시간과 여지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통합시장에게는 지역의 미래를 보고 현안을 과감히 풀어헤쳐 나가는 냉철한 결단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수산물 생산량 전국 1위 '굳건'

지난해 생산량 213만t·생산액 3조6219억 기록

전남도가 수산물 생산량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수산 1번지' 명성을 재확인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분석 결과 2025년 수산물 생산이 213만t, 3조6219억원으로 전국 생산량(355만t)의 60%, 생산액(9조 170억원)의 40%를 차지해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14.0%, 생산액은 2.2% 증가한 규모다. 이는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 작황 호조와 고수온기 폐사율 감소 등 양식 생산 여건이 개선되고, 넙치 등 일부 어종의 산지 가격 상승과

살오징어·병어 등 어선어업 어획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업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양식어업은 전년도보다 125억원 증가한 2조2835억원(196만240t), 어선어업은 909억원 증가한 1조688억원(15만917t), 내수면어업은 260억원 감소한 3316억원(1만7040t)을 기록했다.

내수면어업의 경우 뱀장어 생산량이 늘었지만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체 생산액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어류가 전년도보다 758억원 증가한 1조3928억원(13만9359t), 패류는 265억원 증가한

6477억원(12만2769t), 해조류는 505억원 감소한 1조1425억원(182만8519t), 갑각류는 229억원 증가한 2327억원(2만 5194t), 이 외 기타 수산물은 27억원 증가한 2062억원(1만2356t)으로 집계됐다.

특히 K-푸드 대표 수산물인 김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출하 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생산액은 전년도보다 1170억원 감소한 8420억원(55만5283t)으로 나타났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이 수산물 생산 1위를 이어나는 것은 어업인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며 "수산물 생산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

광주시,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20일부터 시행

신규·변경 신고때 신청하면 발급... 발급단가 현행 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표기를 없애고 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번호판 크기를 키운 전국번호판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

판 규격이 작아 시인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번호 체계는 전국번호 체계로 전환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기존 21cm×11.5cm(청색)에서 21cm×15cm(흑색)로 확대한다. 세로 길이가 3.5cm 늘어나면서 원거

리에서도 번호 식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번호판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때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며, 구조상 부착이 어려운 차량에 한해서는 기존 지역번호판 발급을 허용한다.

시는 전국번호판 도입에 따라 발급 단가(현행 4800원) 인상을 고려했으나 중립 검토 결과 현행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내버스 요금 이르면 6월부터 오른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의결...교통카드 기준 250원 인상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광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버스정책심의회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내버스 요금을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현금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다만 청소년(교통카드 800원·현금 1000원)과 어린이(교통카드 400원·현금 500원)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시는 유가 급등, 인건비 상승, 준공영제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요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준공영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도 시내버스를 운영 중인 광주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약 1400억원(2024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운전원 인건비도 최근 10년간 평균 3.56% 인상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